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여경
수탁 과제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가치증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개발 연구	심경미
	공동화되는 농촌의 미시적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여혜진
	인구구조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연구	고영호
	미래형 국토도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선방향 연구	성은영
	문화재 관리 체계에서 세계유산지구 관리방안 연구	이규철

수시과제

❶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축위원회 심의는 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기준을 상회하거나 주관적인 심의의견으로 인해 심의내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심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절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건축주인 국민·기업에 상당한 규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건축법」 및 타 법령 제·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행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1972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심의만 하였으나,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등 특정구역 지정과 특례 적용 및 건축허가 제한 관련 사항뿐 아니라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건축위원회의 역할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국민·기업의 규제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목적과 법적 성격 등 건축위원회 심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토대로 피규제자가 체감가능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심의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의 합리적·효율적 운영 및 국민·기업의 건축심의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여경](#)

①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가치증진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개발 연구

2020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5년마다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설정하여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 및 국가 기본계획 수립(2022.4)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역사문화권'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전반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한편, 고도, 역사문화유산, 지역자산 등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역사문화권 해당 지역의 유적지 주변에서 공공사업/건축/개발사업 등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역사문화권 및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적지 주변 공간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참고하는 '역사문화권 디자인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는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이해를 돕고, 정비구역 설정과 정비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안내하고, 정비구역에서의 공공사업/건축/개발사업 계획과 설계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 성격을 지닌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강화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심경미

② 공동화되는 농촌의 미시적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새정부는 국정과제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그간 간과되어온 농촌의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의 공간적 부조화 문제에 대응하여 토지이용의 관리 및 재배치를 유도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와 농촌 고유의 토지자원을 육성·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통해 공간 재구조화를 견인하고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농촌특화지구는 우리나라 국토관리체계상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지역/지구 등에 해당하며, 농촌마을 생활환경에 입접하여 입지가 허용되는 공장, 축사 등 위해시설의 입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대한 특별용도지역제의 역할을 갖는다. 이러한 정책의 관점에서 읍면소재지는 농촌 정주체계상 거점의 기능을 갖지만, 최근 인구감소와 중심지의 기능쇠퇴로 인해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토지이용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읍면소재지와 주변부는 도시적 토지이용과 농촌적 토지이용의 혼재가 심화되고 있어 살고 싶은 농촌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읍면소재지 및 주변부를 대상으로 도시적 토지이용과 농촌적 토지이용 변화의 공간적, 제도적 여건을 파악하고 생활 및 생산관련 상충하는 토지이용의 공간적 근접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전략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촌의 생활 및 생산관련 토지이용의 체계화된 관리와 누적된 토지이용 갈등관계로 인한 공간적 부조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을 살고 싶은 농촌으로 전환하는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여혜진

3 인구구조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연령통합 생활환경지표 연구

정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종합적인 정책 수행방안 마련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전 세대가 공존하는 연령통합적(age-integrated) 사회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영향은 매우 다각적이기 때문에 연령통합적 사회시스템은 기존의 저출산 또는 노령인구 대상의 제한된 정책을 벗어나 새로운 초고령사회 인구구조에 대한 적응을 위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전반의 다각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연령통합'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제안된 개념이다. 하지만 연령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며, 합의된 개념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연령통합은 사회통합 등의 개념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연령통합 측정을 위한 지표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으로 연령통합 생활환경 진단 및 조성에 대한 논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대중친화적 연령통합 개념 용어 및 우리나라 물리·사회·생활환경 부문을 진단하는 연령통합 생활환경 지표 개발과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범적용, 지자체의 활용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연령통합 사회 구축의 논의 근거를 제공하고 국가 정책개선 및 전략 제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영호

4 미래형 국토도시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선방향 연구

우리나라 최상위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2002년 제정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인구 및 경제의 최고 성장기였던 2000년대를 지나 2020년 이미 국가 전체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경제적 저성장은 계속되어 90년대 7%대였던 잠재성장률이 2023년에는 1%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더욱 강화되고 지방도시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장기를 지나 침체기, 축소기에 이르는 동안 「국토계획법」은 113차례 조항 개정은 있었지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체계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 저성장, 전대미문의 감염병 유행, 기후변화 등 사회적 위험 증가로 미래 불확실성도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성장기의 획일적·양적 팽창 중심의 도시계획으로는 도시문제 대응이 어려워졌다.

이에 이 연구는 도시문제와 여건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저성장 시대에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간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도의 개편, 입지규제 최소화 등 개편방안, 공공기여제도 확대 방안, 생활권 도시계획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농촌 등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각 도시계획적 수단과 전략을 도시계획체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은영

5 문화재 관리 체계에서 세계유산지구 관리 방안 연구

2021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 시행으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관리 이외에 「세계유산법」에 의한 관리 제도가 추가되었다. 그동안 세계유산은 「문화재보호법」과는 관계없이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절차에 따라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별 세계유산의 범위, 가치 기준, 보존 방법, 행위허가 기준 등의 전반적인 관리의 체계가 국내 문화재 관리와는 다른 체계를 따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목록인 세계유산은 '세계유산 구역(Property)'과 '세계유산 완충구역(Buffer zone)'으로 구성되며, 국내에서 제정된 「세계유산법」에서는 두 지역을 합쳐서 '세계유산지구'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ICOMOS, ICCROM, IUCN 등은 지속적으로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의 개념 및 관리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세계유산 제도 운영에 참고가 되는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위원회에서는 2018년부터 세계유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산영향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세계유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유산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세계유산지구 또는 문화재 구역(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으로 한정하고,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유네스코에서 2022년 개정하여 발간한 유산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세계유산의 OUV에 영향을 준다면 완충구역 밖에서도 동일하게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법」의 세계유산지구의 지정과 관리, 그리고 유산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국내 문화재 관리 체계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문화재 관리체계에서 세계유산 구역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리의 쟁점을 도출하고, 국내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및 관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으로서 세계유산 지침과 국내법으로서 「세계유산법」의 정합성을 고려한 세계유산지구의 개념과 관리목표를 정립하여 안정적인 세계유산 제도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문화재 관리 체계와 부합하는 유형별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방안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철

2022 공공자원(커먼즈) 학술대회 및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공공자원(커먼즈)을 제도화하기, 공간을 공동관리(커머닝)하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지난 9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제주대학교 및 제주도 일대에서 ‘공공자원(커먼즈)을 제도화하기, 공간을 공동관리(커머닝)하기’를 주제로 2022 공공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 및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근현대 건축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시행하는 가치조사, 활용기획 등에 대한 현장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첫째 날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커먼즈 관련 사례 지역의 현장답사 및 한국법제연구원의 ‘제8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 개최된 2022 공공자원(커먼즈) 및 제도화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는 ‘공간의 커머닝에 초점을 맞춘 커먼즈 제도화’라는 주제 아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제1세션 ‘커먼즈의 제도화’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제2세션 ‘공간을 커머닝하기: 사례를 중심으로’가 각각 운영되었다. 이규철 부연구위원은 제1세션에서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으며, 손은신 부연구위원은 제2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커먼즈 제도화의 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박배균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공공자원(커먼즈)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이후, 이상과 실제’ 공개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7일(금)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이후, 이상과 실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김주경 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설계공모 이후 계획안의 변화’를 주제로 설계공모 이후 당선안의 변형 실태와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두 번째로 양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은 ‘설계공모 이후를 바라보는 발주자와 설계자의 시선’을 통해 공공건축 생산과정에 대한 발주자와 설계자의 인식차이를 설명하며,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특성과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설계공모의 도입 취지와 실재를 살펴보고, 공공건축 제도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전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승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명승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이기옥 파주시 총괄건축가, 차은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준법경영팀장,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공공건축 생산과정 개선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 아래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도입된 설계공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2 AURI 경관포럼 ‘도시경관을 위한 높이관리, 가능성과 방향’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한국경관학회는 10월 21일(금) 서울공예박물관에서 2022 AURI 경관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도시경관을 위한 높이관리, 가능성과 방향’을 주제로, 도시경관과 높이관리에 대한 현안과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도시경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의 가능성과 정책방향을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도시경관에서 높이관리의 필요성과 가능성’과 함께 높이관리를 위한 정책사례 및 현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이정민 청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주무관이 ‘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청주 원도심 높이관리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로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지CS 대표가 ‘광주 도심부 높이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사례와 현안’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높이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인호 한남대학교 교수, 신지훈 단국대학교 교수,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도시경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의 가능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2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세미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이야기하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10월 21일(금)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탄소중립 국가로의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위해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박윤민 (주)인테그라이엔씨 책임연구원이 '건축물과 건설 탄소중립,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를 주제로 Zero Carbon 로드맵을 제안하며,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트렌드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남성우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권 단위의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계획 방향'을 통해 생활권 공간계획 요소에 따른 탄소중립 모형개발 및 배출량을 분석하여 제도 및 정책으로 제안하는 일련의 연구과정과 결과를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에는 김호정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단국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auri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
AURI 스페셜 세션
'미래도시와 스마트시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21일(금)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AURI 스페셜 세션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래도시와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미래도시 관련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박소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은 '메타버스와 미래 공간이야기'를 주제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과 유형을 소개하고 디지털 트윈과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강범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Good and Smart Cities : 미래도시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 사회적 이용 등 스마트도시의 공공성 논쟁을 짚어보고, 스트리트뷰를 활용한 보도데이터 자동생산 방법론 개발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권오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주제로 스마트도시계획 정체성 강화 방안, 도시·군기본계획과 연계 강화 방안,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철 KAIST 교수(스마트시티연구센터장)와 최지연 스마트도시협회 사업본부장(스마트도시연구소장),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2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데이터로 읽는 건축·도시공간의 미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일(금)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2022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AURI 건축도시포럼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중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담론의 장이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로 읽는 건축·도시공간의 미래’를 주제로, 건축·도시 분야의 변화와 트렌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장윤규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기초발제 ‘미래공간, 상상하다’를 시작으로, 김승범 VWL 소장의 ‘휴대폰 데이터에 담긴 이동과 생활권’, 안지용 LG경영연구원 공간연구소장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공간 트렌드’,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물리환경 예방안전!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의 시작’, 박소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의 ‘도시 개발·운영 과정에서 디지털트윈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을 좌장으로 5명의 발제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도시건축 분야의 정책 및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 투자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제2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인천광역시는 11월 9일(수)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2 제2차 AURI-광역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5년 이후 인천광역시가 추진해 온 건축자산 정책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환영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첫 번째로 이규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건축자산 제도의 운영 현황과 건축자산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두 번째는 김경배 인하대학교 교수가 ‘시민이 참여하는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관리 방향’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승호 도시건축속도 부장이 ‘인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진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송석기 대한건축학회 건축자산 및 기록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으로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 정동석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 이연경 인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홍현도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토론에 나섰다.

auri

202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을 말하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은 11월 9일(수) 서울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을 말하다’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인구 과소화 시대의 지방도시와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전상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 ‘지방도시 및 인구문제의 당위와 현실’을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성장과 쇠퇴로 본 한국 도시 트렌드’를,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까지’를,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미래 농촌공간이 사는 법 : 농촌다움의 보전과 창조’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태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윤주선 충남대학교 교수, 홍석영 농촌진흥청 과장, 안재락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 기자가 참석하여 지방도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였다.

2022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CPTED 연구와 사업의 미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경찰청은 12월 1일(목) 건축공간연구원 중회의실에서 2022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두 기관은 2019년 9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범죄예방 정책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연구 및 사업성과를 알리기 위해 매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정책연구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CPTED 연구와 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연구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개회사 및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성과로, 임보영 부연구위원의 ‘가상환경(VR)을 이용한 주거 침입범죄 영향요인 분석’과 허재석 연구원의 ‘가상환경(VR)을 이용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조도기준’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는 경찰청의 사업성과로, 김민일 경사의 ‘서울 은평구 셉테드 사업성과’와 김혜진 경위의 ‘충북 영동군 셉테드 사업성과’를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에는 이동희 경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강용길 치안정책연구소 법정책연구실장, 김지훈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범죄예방 정책발전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2 제4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제주도시재생포럼 ‘동네공간 X 동네기획 : 동네를 바꾸는 사람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목) 제주시에 위치한 혁신창업거점 W360 알파에서 2022 제4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2022 제주도시재생주간 정책포럼의 일환으로, ‘동네공간 X 동네기획 : 동네를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 마을과 동네공간을 기획하고 큐레이션하여 지역 내 다양한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 동네기획자, 마을건축가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재생 주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준형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소장의 ‘후암동에서 건축가로 살아가기’로, 후암노트 및 후암가옥의 기록화 전시와 공유공간 기획, 지역주민과의 관계맺기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문승규 블랭크 대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살고 싶은 동네 만들기’를 주제로, 활동계기와 과정, 빈집 큐레이션 플랫폼 ‘유휴’ 등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과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위한 동네 플랫폼: 동네공간과 도시재생회사’를 통해 지역 기반의 동네를 바꾸는 민간주체의 중요성과 사례, 도시재생회사 도입 제안 등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김중현 제주더큰내일센터장과 전정환 Community X 대표가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재생을 위한 민간주체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2022년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집담회 ‘공공이 경관에게, 경관이 공공에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10월 27일(목) 문화역서울 284 RTO에서 2022년 경관디자인+공공디자인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이후 경관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두 번째 연합행사로, ‘공공이 경관에게, 경관이 공공에게’이라는 주제 아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특징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이석현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회장의 개회사 및 쿠니요시 나오유키 요코하마대학 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 회장의 기조강연 ‘경관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공유가치’를 선보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은정 (주)을 소장장 심윤서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소 연구원이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로 신은주 유한회사 두다 대표와 표승화 (주)에스디디자인그룹 공공디자인연구소장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사업’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두용 인천광역시청 팀장과 오병찬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장이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해준 계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류영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본부장, 이현성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경관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공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6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2월 2일(금) LW컨벤션에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제6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행정안전부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의 개회사 및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연설에 기르트 반 웨그(Geert van Waeg)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국외의 보행자 안전 사례와 도시환경을 소개하였다.

세션1에는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보행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폴 슈파와니치(Paul Supawanich) GDCI 팀장의 ‘더 안전한 가로 만들기’를 발표하였다. 이어 세션2에는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유동승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의 ‘차 대 보행자 사고 판결례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키스 스틸(Keith Still) 서포크대학교(University of Suffolk) 초빙교수의 ‘효율적 인파관리 방법’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하동익 前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한성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명요희 도로교통공단 교통운영연구처장,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정책연구소장, 변완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윤재용 한국도로협회 도로교통연구실장이 참여하여 안전한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아동을 위한 주거'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4일(수) 서울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아동을 위한 주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관계자, 아동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로 Mona Meienberg UNICEF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이 영상을 통해 'Child Friendly Living Spaces are more than just playgrounds'를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로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아동의 주거권과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아동친화주거공간의 조성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부병 국토교통부 사무관,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과장, 백혜선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참석하여 아동을 위한 주거공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11월 16일(수) 서울 인사동 코트에서 '제3회 대한민국 미래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행사로, 우리나라 건축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건축분야를 발전시키고자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제로 에세이, 포스터, 동영상 3개 분야를 모집하여 총 149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2차 심사를 통해 우수작 4개, 장려상 5개로 총 9개 작품을 선정하였다. 우수작은 시상식 당일 전문가와 청년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우수상에는 'BIN, 국민참여건축업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에세이)', '나때는 말고 나부터(영상)'이 각각 수상하였다. 시상식 이후 진행된 청년정책감담회는 산·학·연 전문가와 청년대표, 수상자가 참석하여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auri



건축공간연구원 -(사)한국건축가협회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 -(사)한국프롭테크포럼 MOU 체결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6일(목) 서울시건축전시관에서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사)한국건축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건축서비스 및 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건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세미나, 포럼 등 국내·외 관련 행사 개최 또는 참여 등의 업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건축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건축 제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보다 나은 공간환경을 국민들에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긴밀히 교류협력하여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물 정보 기반의 프롭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11월 28일(월) 메타버스플랫폼 SOMA의 42컨벤션센터에서 (사)한국프롭테크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롭테크 분야의 인식 확산,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정보 및 교류·기술·자료 등의 교류 ▲프롭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사업 발굴 및 수행 ▲공간정보 기반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협력 ▲세미나, 컨퍼런스 등 국·내외 관련 행사의 공동 개최 및 협조 등 업무 협력을 강화하여 프롭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이에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의 프롭테크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여 글로벌 프롭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2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등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공간연구원은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공공 가치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건축 조성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 공공건축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자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올해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관계자 실무교육’, ‘건축사 공공건축 실무교육’,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 관계자 및 건축사를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공공기관 관계자 및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관계자 실무교육 및 건축사 공공건축 실무교육은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340명 가량이 참석하였으며 이 중 건축사 실무교육은 2022 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은 총 640명 가량이 참석하였으며, 우수 공공건축 사례와 추진과정을 공유하는 교양교육과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건축기획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한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이 11월 29일(화) 건축공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11년 이후 올해로 열두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인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마음을 품은 한옥'을 주제로 준공한옥, 학생공모, 사진, 영상 4개 부문을 공모하였으며, 총 554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류·발표·현장심사를 거쳐 준공부문 2점, 학생공모 부문 16점, 사진부문 28점, 영상부문 8점 등 총 54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준공부문은 한옥 사용자의 만족도와 설계·시공 품질 등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를 심사하여 올해의 한옥상에는 '예맥당'을, 한옥 공공건축물 상은 '남한산성 119 안전센터'를 선정하였다. 학생공모부문은 한옥 공간의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문화도서관을 기획한 '닭고, 닭다'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사진부문에서는 집이라는 일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구성을 선보인 '지붕선의 미학'이, 영상부문에서는 다양한 촬영 기법과 로케이션으로 세련된 촬영과 편집을 구현한 '우리의 한옥'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 AURI 석·박사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2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2 AURI 석·박사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 대학원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운영되었으며, 월 1~2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동 연구 수행, 논문작성 등을 지원하였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참가자	연구주제
임효정	도시공원의 노인친화특성이 공원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민진	범죄 안전을 위한 서울시 청년 여성 1인 안심주택 사례 연구
차민영	저영향개발 기법의 기능 및 경관 측면의 유지·관리 방안 연구
육현성	보존가치 검토기반 근현대건축물 리트로핏 기술 검토
방홍순	텍스트 마이닝과 공동주택 하자
강지수	지역주민의 접근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경계부 구성 분석
조선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활성화 지역 주민역량 및 중간지원조직 상관성에 관한 연구